

北韓의 經濟發展과 成果比較*

鄭 甲 泳

- | | |
|--------------------|-------------------|
| I. 序論：北韓의 經濟體制와 構造 | IV. 北韓 經濟成果의 國際比較 |
| II. 北韓의 基本 經濟政策 | V. 北韓 經濟成果의 評價 |
| III. 北韓 經濟의 發展 | |

I. 序論：北韓의 經濟體制와 構造

북한은 1946년 이후 전형적인 命令型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유지해 오고 있다. 명령형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2차대전 이후 소련과 그 위성국에서도 도입된 것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이 中央計劃當局(Central Planning Board)의 명령에 의해 통제되는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물자의 生産과 交換 및 分배 과정이 정부계획에 의해 통제되며 시장의 가격기능은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체제에서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특성인 생산수단의 共有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意思決定과 情報流通의 構造가 모두 수직적으로 中央集中化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체제에서는 중앙계획당국의 “명령”이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에서의 가격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시장의 需給 과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부의 명령으로 결정된다. 기업의 소유도 모두 국가나 공공단체로 되어 있으며 흔히 말하는 경제적 이윤추구행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 체제에서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중앙계획당국에서 배정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는데 있다.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 第3會議에서 主題發表한 것임.

경제주체가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의 구조(motivation structure)도 자본주의 경제와 달리 물질적 유인(incentive)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물질적 유인보다는 오히려 道德的 誘引(moral incentive)을 강조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행동해야 되는 것을 동기부여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전통적 사회주의체제는 戰後 소련과 東歐에서 도입 실시된 이후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東歐에서는 전형적인 명령형 체제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유발함에 따라 60년대 부터 가격기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대폭 보완된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체제를 도입하여 가격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자주관리제(self-management system)를 실시하였다. 헝가리에서도 新經濟機構(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하여 가격기능을 제고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려는 체제개혁이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개혁도 결국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88년 이후 동구권에서부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46년에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실질적인 체제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결과 북한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오히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내에서 “主體思想”을 보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폐쇄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은 전형적인 명령형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에 의한 자급자족적 경제를 지향하는 폐쇄체제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설명하고 국제간 비교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기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북한의 기본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경제발전과정과 남북한 경제현황을 비교하기로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성장과 효율성 및 실물지표

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과를 국제적 관점에서 평가하기로 한다.

II. 北韓의 基本 經濟政策

2.1 민족경제와 중공업육성

북한은 지난 40여년동안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로서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민족경제의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이것은 해방직후 “식민지 경제의 왜곡된 편파성과 기형성을 청산하고 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노선을 천명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실제 이러한 노선에 따라 土地改革과 主要産業의 國有化가 단행되었으며 “자력갱생”의 원리는 主體思想의 도입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즉, 1960년대 후반 主體思想이 확립되면서부터 자립지향적인 경제노선이 강화되고 경제적 자립이 곧 정치·외교·군사적 독립의 필요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북한의 자립경제 건설노력은 경제상황과 개발계획 및 국제정치적 여건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북한은 우선 重工業을 育成한 후 경공업과 농업의 균등발전을 이룩하는 경제발전을 표방하여 왔다. 이와 함께 현대적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자·전문가 및 원료기지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이와 같은 발전의 여건이 종합적 체계로 형성되면 민족적 자립경제가 달성된다고 역설하였다.¹⁾

이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전략은 중공업 우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재를 산출하는 중공업 부문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력(生産力)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 밖에도 북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1965. 4.14), 「북한 경제 자료집」 통일문제연구소, 1985, pp.181-187.

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²⁾

첫째, 生産手段을 공급하는 중공업 부문을 먼저 육성해야만 급속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生産力의 발전속도가 生産關係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급속한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생산재 공급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둘째, 輕工業과 農業의 발전도 생산재의 충분한 확대공급과 중공업 발전을 통한 기본여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업의 발전없이는 경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전산업의 발전이 제약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인민경제”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공업화도 중공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공업이 발전되어야만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시킬 수 있는 物質·技術的條件이 충족된다는 것이다.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북한의 경제구조는 급속히 공업위주로 전환되었다. 공업은 1946년에 사회총생산의 23.2%에 불과하였으나 49년에는 36.6%로 증가하였고, 64년에는 무려 62.3%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도 주체사상과 결합된 重工業 우선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전국적인 기술혁신 운동, 산업설비의 근대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견고화 등 많은 정책수단이 동원되었다. 이에 따라 1971-76년의 6개년 계획 기간중 공업생산은 2.5배 증가되었고, 77-84년의 7개년 계획에서도 2.2배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71-76년의 6개년 계획기간에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공업원료의 60-70%를 자급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또한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 발전전략도 이 기간중에 도입되었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초기 개발과정을 급속하게 추진하여 공업위

2) 정감영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과 기본정책노선”, 「북한의 경제」, (이태욱 편), 을유문화사, 1990, pp. 49-50.

주의 경제구조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生産財의 擴大만을 강조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不均衡의 경제구조를 창출하여 농업과 경공업 부문이 현저하게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중공업 육성이 기술혁신이나 높은 생산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勞力動員에 의한 노동력의 투입증대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유지하여 왔다. 이 결과 북한의 공업우선 정책은 70년대 중반부터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중공업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2.2 内部指向的 閉鎖性

북한경제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내부지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한 결과로서 나타난 경제구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체사상에 입각한 경제정책의 결과라고도 설명될 수 있다. 주체사상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의 확립을 주창하였기 때문에 무역거래의 확대를 추진하는 외부지향적 개발전략과는 상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기반을 둔 對內指向的 開發戰略이 주체사상과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급자족만을 확대하여 자립경제를 구축하자는 논리로도 통용되었다.³⁾

실제 북한은 주체사상이 국제관계의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자주성을 기초로 상호존중과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국수주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만 국제무역에서는 경제적 실리를 위하여 주체사상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왔을 뿐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외부의 원조없는 自力更生을 주장하고, 대외적으로는 실리추구를 위한 무역증진과 협력을 강화하여 왔던 것이다. 이

3) 북한의 내부지향적 개발전략은 해방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6개년 계획기간(1971~76)중에 나타난 외채상환 불능위기에서부터 강조된 정책노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Chung(1974))

과정에서 70년대 후반 대외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고, 이 결과로 불가피하게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해오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개발초기에 공업발전에 필요한 기초원자재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의 확보를 위한 수출도 추진하였다. 1946-69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4.2배 증가하였고 수출은 3.8배 증가하였다.⁴⁾ 그러나 이 기간에도 원자재의 국내조달 비율을 60-70%로 확대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內部指向的 開發戰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한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러한 대내지향적 개발정책의 결과, 북한의 수출입의존도 $\{(수출+수입) / GNP\}$ 는 1989년에 22.7% 90년에는 19.9%에 불과한 실정이다.⁵⁾

북한의 대내지향적 개발전략은 1975년 대외채무 불이행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어 왔다. 당시 북한은 20억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를 안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계기로 對西 貿易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주체사상과 연계하여 대내지향적 폐쇄경제하의 자급자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內部指向的 開發政策은 북한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에서 내부지향적으로 발전된 북한의 공업은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소비재산업도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크게 낙후되었고 일부 생필품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폐쇄된 체제에서 대내지향적 전략으로 이룩된 북한의 경제발전은 개발초기에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기적 성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외부세계와 경쟁이 차단된 가운데 이룩된 공업발전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을 육성하게

4) Chung(1974), p.105.

5) 국토통일원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자료」 (1989).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成長의 制約은 1980년대에 더욱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소련을 비롯한 CMEA 국가의 경제침체와 더불어 북한 경제도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자본주의 국가와도 자본과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開放政策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일면 전통적인 폐쇄경제 체제에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체제가 아직도 경직되어 있고 개방을 위한 법적, 정치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슴슴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최근 소련과 동구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개방도 필연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타 사회주의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제의 개방은 분명히 정치체제의 개혁을 수반하는 체제의 붕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정책이 경제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제불안의 우려로 급진적인 개방정책으로 선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폐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Ⅲ. 北韓 經濟의 發展

3.1 經濟開發計劃의 成果

북한의 경제발전은 개발계획의 테두리내에서 매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총량목표를 최우선시하는 외연적 개발전략으로 추진되어 왔다. 북한경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와 전략이 곧 북한경제의 제약요인과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개발계획의 목표는 계획기간에 따라 다소 변동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공업육성과 산업부문의 자립도 제고에 있었다.

〈표 1〉 북한의 주요 경제개발계획과 실적

| 계 획 | 기간 | 주요 목표 | 주요 실적 |
|---------------|-------------|---|---|
| 제1차 1개년계획 | 1947 | 企業所復舊操業 國營商工業增大 | 공업총생산 : 70% 증대 양곡수확고 : 17만톤 증산 |
| 제2차 1개년계획 | 1948 | 공업의 편파성극복 원가절감 | 공업총생산 : 260% 증대 |
| 2개년계획 | 1949 -50 |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 국영산업총생산 : 198% 증대 |
| 전후복구 3개년계획 | 1954 -56 | 前戰水準의 도달 | 국민소득 : 160% 증대 공업총생산 : 2.8배 노동생산성장률 : 196% |
| 5개년계획 | 1957 -60 | 공업화의 기초구축 의식주문제 기본적 해결 | 국민소득 : 2.2배 공업총생산 : 3.5배 계획목표 1년 조기달성 |
| 제1차 7개년계획 | 1961 -70 | 중공업발전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 생활의 향상 | 공업총생산 : 3.3배 노동생산성장률 : 147.5% 계획기간 3년연장 |
| 6개년계획 | 1971 -76 | 國防·經濟 並進 산업설비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 국민소득 : 1.7-1.8배 공업총생산 : 2.2배 노동생산성장률 : 155% |
| 제2차 7개년계획 | 1978 -84 | 인민경제의 구체화· 현대화·과학화 독립채산제 강화 대외무역증대 | 공업총생산 : 2.2배 전력생산성장률 : 178% 철강생산성장률 : 185% |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은 1947년 제 1 차 1개년 계획을 실시한 이래 1987년에 시작된 제 3 차 7 개년 계획(1987-93)에 이르기까지 9개의 개발계획을 실시하여 왔는데 주요 목표와 업적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1950년대 전반까지는 주로 戰後 복구사업과 공업생산에 주력하였고 국영상공업의 확장과 공업기

반조성에 집중투자 하였다. 특히 2개년 계획(1949-50)기간에는 농업과 낙후산업의 개발을 주요과업으로 선정하여 균형된 산업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51년대 중반의 3개년 계획기간에 戰前水準의 복구를 완료하고 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工業化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특히 5개년 계획기간(1957-60)에는 국민소득이 2.2배 증가하고 공업생산이 3.5배 증가되어 계획목표를 1年 早期達成하는 성공적 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147.5%에 달하여 이 기간중 상당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공업화와 산업발전은 6개년계획(1971-76)을 계기로 점차 고도성장에서 低成長體制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이 계획목표에 미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과장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의 징후가 여러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경제의 침체는 특히 7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왔다. 각 경제개발계획 기간중 평균성장률의 목표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1차 7개년 계획 중 실적은 8.6%로서 계획 목표(14.6%)에는 크게 미달하였으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6개년 계획기간중에도 목표에는 미달되었으나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2차 7개년 계획(78-84) 기간에는 4.5%의 성장률만을 달성하여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3차 7개년 계획기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2> 경제성장의 목표와 실적

(年平均 성장률, %)

| 개발계획 | 1차7개년 (1961-67) | 6개년계획 (1971-76) | 2차7개년 (1978-84) | 3차7개년 (1987-93) |
|------|--------------------|--------------------|--------------------|--------------------|
| 목 표 | 14.6 | 10.3 | 9.6 | 7.9 |
| 실 적* | 8.6 | 6.0 | 4.5 | 3.0** |

주 : * 추정치, ** 1988년 실적치.

3차 7개년 계획기간에 북한은 2차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본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목표로는 국민소득의 1.7배, 공업생산의 1.9배, 농업생산의 1.4배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침체를 반영하여 주요 산업의 장기목표가 수차례 조정되어 왔다. 즉, 전력과 석탄 및 주요 산업의 生産量 目標은 당초 1980년에 발표되어 89년까지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 달성년도 3차 7개년 계획이 끝나는 93년으로 연기되었다.

특히 3차 계획기간 중에는 기술혁신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무역과 對外 經濟協力の 확대 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산업개발에서도 이러한 정책목표가 반영되어 산업의 현대화와 기술혁신이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곧 북한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3.2 南北韓 經濟現況의 比較

북한의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서 남북한 경제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분단이전에 양국은 동일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최근의 경제현황 비교가 분단 이후 양국체제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경제성과의 비교는 성장과 안정, 효율 및 형평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그러나 북한경제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과비교에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의 비교지표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민총생산(GNP)과 국민소득 마저도 정확한 통계자료가 미비되어 있다. 북한은 국민총생산(GNP)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사회총생산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6)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鄭甲泳, “經濟體制의 成果比較: 거시변수 및 실물지표에 의한 접근,” 「東西研究」1990년 겨울.

또한 일부 발표된 자료도 과장과 왜곡이 심하여 정확한 통계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외부 국제기관에서 연구한 북한경제의 추계자료도 많지 않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실상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항상 심각한 자료의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자료의 제약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가급적 이용가능한 자료 중 신빙성이 높은 내용을 인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GNP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社會總生産物(Gross Social Products: GSP)는 「일정한 기간에 해당 사회에서 창조된 물질적 향리품의 총계」로서 “사회적 생산의 견지”에서 파악된 “생산물의 총계”로 정의된다.⁷⁾ 사회생산물은 공업·농업·건설·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 부문에서 창출된 생산물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GSP에는 수송과 통신을 제외한 서어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GNP에서 제외되는 中間財의 去來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NP와 GSP의 직접 비교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1965년까지 사회총생산액(GSP)과 국민소득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공식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89년의 국민소득이 2,530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

최근 국토통일원이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남북한 경제현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GNP는 231억불, 1인당 GNP는 1,06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GNP 2,379억불과 1인당 GNP 5,569불에 비교하면 북한경제의 거시지표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 GNP는 남한의 9.7%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은 19.1%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GNP를 비교적 높게 추정했던 美CIA의 자료에서도 南北韓 1인당 GNP 비율은 3.9 : 1 (1984)로 평가되었다.

7) 사회과학원, 「경제사건」, 1970.

8) 한편 소련의 일부 연구기관은 북한의 1인당 GNP가 인도와 중국수준인 400불 내외에 불과하고 생산설비 가동률도 에너지 부족으로 50%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The Economist, October 20, 1990)

〈표 3〉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1990)

| 구 분 | | 단 위 | 남 한 | 북 한 | 비교지수 (남한=100) |
|-----------|--|------|--------|--------|------------------|
| 인 구 | | 만명 | 4,279 | 2,172 | 50.7 |
| G N P | | 억불 | 2,379 | 231 | 9.7 |
| 1 인 당 GNP | | 불 | 5,569 | 1,064 | 19.1 |
| 경제 성장률* | | % | 12.8 | 2.8 | 21.9 |
| 수 출 | | 억불 | 650 | 20 | 3.1 |
| 수 입 | | 억불 | 698 | 26 | 3.7 |
| 해 외 의 존 도 | | % | 56.7 | 19.9 | 35.1 |
| 재 정 규 모 | | 억불 | 32.3 | 15.0 | 46.4 |
| 곡 물 생 산 | | 천M/T | 7,160 | 5,482 | 76.5 |
| 에너지공급량 | | 천TOE | 81,398 | 28,742 | 35.3 |
| 군사비 지출 | | 억불 | 97.6 | 49.6 | 50.8 |
| 군사비/GNP | | % | 4.1 | 21.5 | 524.4 |
| 제강능력 | | 만톤 | 2,540 | 594 | 23.4 |
| 석탄생산 | | 만톤 | 1,722 | 4,330 | 251.0 |
| 아연생산 | | 천톤 | 265 | 295 | 111.0 |
| 자동차보유 | | 천대 | 3,375 | 264 | 7.8 |

* 1986-89 연평균.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86년-88년중 연평균 2.8%로서 남한의 12.8% 성장보다 현저히 저조하였다. 남북한의 경제력은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후반부터 북한경제의 침체가 가속되어 왔다.

북한은 수출과 수입규모, 곡물생산, 에너지 공급량 등 거의 모든 주요 경제지표에서 남한보다 훨씬 낙후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석탄과 아연 생산능력 등 일부 광업과 비철금속 부문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IV. 北韓 經濟成果의 國際比較

국민경제의 成果(performance)는 여러 관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시경제의 성과기준으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 안정, 형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제적 자유의 정도,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 여러 부지표나 질적 기준이 논의되기도 하나 이들 지표는 계량화가 곤란한 약점을 갖고 있다.

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는 기본적인 경제변수와 지표의 측정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GNP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격과 환율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제간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비교 가능한 계측치로 조정하거나 추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성과 비교에서는 완전고용과 물가의 안정 및 소득분배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거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성이나 형평의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국민후생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경제구조, 경제발전과정 등을 비교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비교에 활용되는 자료 자체도 대부분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간의 성과 비교에서와 같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기관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성과를 국제비교하여 평가하기로 한다.

4.1 國民所得과 産業構造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 세계 주요 경제권과 사회주의 경제 및 남북한의 국민소득과 산업구조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북한의 1인당 GNP는 89년 현재 1,123달러로서 국민소득 500 달러 이하 低所得 經濟圈

의 平均値(330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저위중진국의 평균치(1,360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북한은 低位中進國 경제권에 속하게 된다. 남한은 상위중진국 경제권의 평균소득(3,150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북한은 아직 저위 중진경제의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소득은 여타 사회주의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국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다만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표 4〉 북한의 소득과 산업구조 비교(1989)

| 국 가 | 인 구 (백만명) | 1인당 GNP (U \$) | 산업별 구성 (%) | | |
|--------|--------------|-------------------|------------|----|-------|
| | | | 농업 | 공업 | 서비스기타 |
| 북한 | 21.4 | 1,123 | 25 | 58 | 17 |
| 남한 | 42.4 | 4,400 | 10 | 44 | 46 |
| 사회주의경제 | | | | | |
| 소련 | 286.2 | 4,739 | 20 | 44 | 36 |
| 헝가리 | 10.6 | 2,590 | 14 | 36 | 50 |
| 유고슬라비아 | 23.7 | 2,920 | 10 | 42 | 48 |
| 체코 | 15.6 | 3,450 | 6 | 57 | 36 |
| 폴란드 | 37.9 | 1,790 | 48 | 11 | 41 |
| 불가리아 | 9.0 | 2,320 | 11 | 59 | 40 |
| 중국 | 1,113.9 | 350 | 32 | 48 | 20 |
| 저소득경제 | 2,948.4 | 330 | 32 | 37 | 31 |
| 저위중진경제 | 1,104.5 | 1,360 | 14 | 35 | 51 |
| 상위중진경제 | 422.7 | 3,150 | 9 | 43 | 48 |
| 선진경제 | 830.4 | 18,330 | 4 | 33 | 63 |

주 : * World Bank 자료에 의거 1인당 GNP 기준으로 저소득경제권은 500불 이하, 저위중진경제는 500-2,400불, 상위중진경제는 2,400- 6,000불, 선진경제는 6,000불 이상으로 구분됨.

** 북한의 지표는 국토통일원 자료.

자료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 The Challenge of Development*(1991), WEFA, *Centrally Planned Economies*, (1989).

한편 북한의 산업구조를 세계 각국과 비교하면 중공업중심의 구조적 특징이 현저하게 부각된다. 즉, 북한의 공업비중은 전체 국민경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등 일부 동구권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북한의 서어비스부문은 17%에 불과하여 저소득 경제권은 물론 여타 사회주의권 경제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가 특이한 형태로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업의 비중은 저개발국가형, 공업은 사회주의 공업국형, 그리고 서어비스업은 극히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4.2 經濟成長

국민소득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경제성장률은 <표 5>와 같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제측기관마다 약간씩 상이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결과의 공통점은 60년대 이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어 왔고 80년대 후반기부터는 경제침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남한은 물론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패턴과는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시장경제는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북한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남한과의 성장률 격차도 70년대를 고비로 크게 확대되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권은 1961-70년 시장경제권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70년대를 정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여 8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국만이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났고, 시장사회주의로 변화된 체제를 유지하였던 유고슬라비아도 80년대 부터는 저조한 성장실적을 기록하였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경제권과 동일하게 70년대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경직된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對外依存度가 낮은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지만, 외부환경의 충격적 변화에는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로 신속적인 정책수단과 가격기구의 미비에 기인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했던 생산요소의 투입증대를 통한 外延의 成長戰略의 한계가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표 5〉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의 비교

| 국 가 | 1961-70 | 1971-80 | 1981-85 | 1986-88 |
|---------|------------|------------|------------|---------|
| 북한 (A) | 7.6 | 7.2 | 3.7 | . |
| (B) | 8.6(61-67) | 6.0(71-76) | 4.5(78-84) | 3.0(88) |
| (C) | . | 5.4(78-80) | 4.3 | 2.8 |
| 남한 | 9.6(65-70) | 7.8 | 8.4 | 12.8 |
| 개도국 | 6.5 | 6.2 | 2.5 | 3.6 |
| 동아시아 | 8.1 | 6.6 | 7.9 | 8.0 |
| 남아시아 | 3.6 | 4.2 | 5.1 | 5.7 |
| 사회주의 경제 | | | | |
| 소련 | 4.9 | 2.6 | 1.9 | 2.3 |
| 동구 | 3.8 | 3.4 | 0.9 | 1.2 |
| 중국 | 3.8 | 5.8 | 9.2 | 9.5 |
| 유고슬라비아 | 3.8 | 5.0 | 1.3 | 1.2 |
| OECD* | 4.9 | 3.2 | 2.6 | 3.4 |
| 미국 | 3.8 | 2.8 | 3.0 | 3.6 |
| 일본 | 10.6 | 4.6 | 2.8 | 4.2 |
| E C | 4.8 | 3.0 | 1.5 | 2.9 |

주 : * A : CIA자료, B : EIU, C : 국토통일원

* 동아시아 : 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뉴기니

남아시아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자료 : The World Bank(199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 : North Korea, 1990-91.*

4.3 경제의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동태와 정태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등을 고려한 동태적 효율성과 일정한 시점에서 기존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중앙계획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한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어 왔다.

체제가 다른 국가간의 동태적 효율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율과 산출

〈표 6〉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의 비교 (1989)

| 구 분 | GNP(Q) (10억 \$) | 노동력(L) (백만명) | 1인당산출량 (Q/L) (\$) | 비교지수 (남한=100) |
|---------|--------------------|-----------------|----------------------|------------------|
| 북한 | 24.0 | 14.1 | 1,702 | 26 |
| 남한 | 186.6 | 28.9 | 6,457 | 100 |
| 사회주의경제 | | | | |
| 헝가리 | 25.9 | 7.4 | 3,500 | 54 |
| 유고슬라비아 | 69.2 | 16.3 | 4,245 | 66 |
| 체코슬로바키아 | 53.8 | 10.2 | 5,275 | 82 |
| 폴란드 | 67.8 | 25.2 | 2,691 | 42 |
| 불가리아 | 20.8 | 5.2 | 4,000 | 62 |
| 중국 | 389.9 | 745.2 | 523 | 8 |
| 저소득경제권 | 972.9 | 1,768.8 | 550 | 9 |
| 저위중진경제권 | 1,501.4 | 392.2 | 3,828 | 59 |
| 상위중진경제권 | 1,331.5 | 256.7 | 5,187 | 80 |
| 선진경제권 | 15,213.9 | 554.4 | 27,462 | 425 |

자료 : World Bank (1991)와 국토통일원 자료(북한)를 이용하여 Gregory & Stuart(1985), Feinstein(1988)의 방법으로 추정됨.

량의 증가 및 요소생산성 등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⁹⁾ 그러나 아직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동태적 효율성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차선의 대안으로 「그레고리·스튜어트」 및 「파인스타인」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태적 효율성을 간단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즉, 이것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을 계측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북한의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은 1,702달러로서 저소득경제권의 평균치 550달러로서 3배 이상 높지만, 저위중진국경제권의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의 비교에서는 북한이 저위중진국의 평균치에 근접했으나 노동자 1인당 산출량에서는 크게 낙후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북한경제의 비효율과 낮은 생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사회주의권과의 비교에서도 북한은 중국보다는 앞서 있지만 동구권에는 크게 낙후되어 있다. 남북한비교에서는 남한 추정치의 26%에 불과하다.

자원배분의 정태적 효율성은 물론 각국의 생산함수와 노동 및 자본의 질적 차이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에만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상당히 반영된 분석에서도 사회주의 경제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효율성이 크게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북한에 대한 단순한 비교적인 <표 6>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일반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생산요소의 투입증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외연적 개발전략에서 기인된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4 實物指標의 比較

시장경제에서 GNP는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계측한 후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가치로 표시한다. 그러나 시장가격과 환율이 왜곡되어 있는 사회주의

9) Gregory, P. & R.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 Houghton Mifflin Co., 1985, pp.49-50.

10) Feinstein, C., "Economic Growth Since 1870,"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4, 1988, pp.1-13.

경제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계측이 곤란하고 발표된다해도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해도 GNP 자체가 경제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느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상이한 체제간의 성과비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實物指標(Physical Indicator) 접근방법이다. 실물지표접근은 국민 1인당 생산, 소비 활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실물로 환산하여 각국의 경제발전수준을 비교하고, 이것을 다시 역산하여 GN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성과비교시 적용환율과 GNP의 추정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물지표에 포함되는 자료의 선정기준과 각 실물지표에 대한 가중치부여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실물지표에 대한 성과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장경제의 GNP를 국제가격(달러)으로 평가한 후 특정한 실물지표와의 관계를 추정한 후, 사회주의 국가의 실물지표를 추정식에 대입하여 GNP를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예를 들면, 실물지표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각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GDP와 회귀분석한 후 이 추정식에 대상국가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대입하여 GDP를 추계하였다. 이결과 추계된 GDP를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대표값을 구하여 실물지표에 의한 추정치로 활용하였다. (Ehrlich (1985, 1989), Joglekar & Zimbalist (1989)) 정(Jeong, 1991)이 主成分分析(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으로 38국의 36개 실물지표를 이용한 북한의 GDP 추계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이 방법은 종전 방법에서 나타난 실물지표에 대한 가중치부여의 자의성을 극복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실물지표의 상관관계와 다공선성분석을 거쳐 상호의존도가 높은 변수를 제거하고,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해 '고유벡터(eigen vector)'의 값

〈표 7〉 실물지표에 의한 경제발전 수준의 비교

(U\$, 1989)

| 국 가 | 1인당 GDP (실물지표추정치) | 比較指數 (남한=100) |
|-----------|----------------------|------------------|
| 북한 | 1,181* | 26.7 |
| 남한 | 4,414 | 100.0 |
| 사회주의 경제 | | |
| 불가리아 | 1,534 | 36.9 |
| 체코슬로바키아 | 3,568 | 80.7 |
| 헝가리 | 3,111 | 70.4 |
| 폴란드 | 1,986 | 44.9 |
| 유고슬라비아 | 2,852 | 64.5 |
| 자본주의 시장경제 | | |
| 일본 | 20,738 | 469.3 |
| 캐나다 | 18,049 | 408.4 |
| 프랑스 | 16,031 | 362.8 |
| 영국 | 13,809 | 312.5 |
| 서독 | 18,090 | 409.4 |
| 이태리 | 15,512 | 351.0 |
| 오스트리아 | 15,896 | 359.7 |

주 : * 단순한 실물지표의 추정에서는 \$1,082-1,620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 Jeong(1991)

과 누적설명도를 파악하여 각국의 주성분지수를 선택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택된 주성분지수와 시장경제의 GDP를 이용하여 북한의 GDP를 추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¹¹⁾ 이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실물지표에 의한 GDP수준은 U\$ 1,181(1989)로서 남한의 실물지표 추정치의 26.8%에

11) Jeong, Kap-Young, "Estimation of North Korea's GDP by Physical Indicators Method" Working Paper(1991).

불과하다. 따라서 실물지표로 평가된 북한의 경제성과 역시 크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V. 北韓 經濟成果의 評價

지금까지 논의된 북한경제의 현황과 체제의 구조적 특성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발전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명령체제와 주체사상이 결합된 이념하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이것은 곧 중공업우선 육성과 내부지향적 폐쇄적 경제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이 결과 산업간 불균형구조가 심화되고 수출입의존도가 낮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둘째, 북한은 70년대 전반까지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실적을 유지하여 왔으나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외연적 성장의 한계와 국제경제환경에의 적응능력 부족, 생산성의 저하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셋째, 국제적 비교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은 최저개발국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하위중진국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이나 효율성의 비교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개도국은 물론 인접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북한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의 성장실적을 여타 사회주의권과 비교하면 국민소득 수준이 아직 동구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비교에서도 국민소득은 높은 수준이나 최근의 성장률은 북한이 훨씬 낮게 추정되고 있다. 경제성과가 반드시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장실적은 북한의 폐쇄적 명령경제체제가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오히려 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산성의 저하, 산업간 불균등, 국제경쟁력의 열위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대부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폐쇄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경제의 성과는 당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개방과 시장기능의 도입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낙후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자료」, 198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1965.4.14), 「북한 경제 자료집」 통일문제연구소, 1985.
- 정갑영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과 기본정책노선”, 「북한의 경제」, (이태욱 편), 을유문화사, 1990.
- 鄭甲泳, “經濟體制의 成果比較 : 거시변수 및 실물지표에 의한 접근”, 「東西研究」1990년 겨울.
- Eva Ehrlich, *Economic Development Level, Proportions and Rates of Growth Based on the Physical Indicators Method, 1937-1980*, Issue paper presented to World Bank Planning Conference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 of Selected Centrally Planned Economies, World Bank, 1989, May.
- Feinstein, C., “Economic Growth Since 1870,”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4, 1988.
- Gregory, P. & R.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Houghton

Mifflin, 1985.

Jeong, K.-Y., "Estimation of North Korea's GDP by Physical Indicators Method," Working Paper, 1991.

Joglekar, G. & A. Zimbalist, "Dollar GDP per Capita in Cuba. Estimates and Observations on the Use of the Physical Indicator Method,"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3, no 1, March, 1989.